

서울시의 잉여건자재 실태와 건자재은행 도입방안

유기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시의 잉여건자재 실태와 건자재은행 도입방안

	요약	3
I.	서울시 잉여건자재의 현주소	4
II.	잉여건자재 수급과 건자재은행 활용 여건	7
III.	서울시 건자재은행 도입방안	11

유기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2-2149-1157
keeyy@si.re.kr

서울시는 실내건축업은 물론이고 주택에서도 상당한 잉여건자재가 발생한다. 잉여건자재는 보관과 폐기 과정에서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외국에서는 건자재은행이 잉여건자재의 유통을 담당하고 있고 우리도 수급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생소하고 운영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정착하기까지 서울시의 관심과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실내건축업에서 연간 47,730톤의 잉여건자재가 발생하여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초래

잦은 이사와 빈번한 업종변경으로 서울은 실내건축업의 집중도가 전국의 37%이다. 실내건축업은 공사규모가 작고 기간이 짧아 잉여건자재를 다량 발생시키는 특성이 있다. 주택에도 41,160톤의 잉여건자재가 쌓여 있다. 잉여건자재는 보관에 약 9만㎡가 소요되고, 폐기에는 840억 원 정도의 건자재 낭비를 초래하고 581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잉여건자재를 적절히 활용하면 그만큼 편익의 발생이 예상된다.

잉여건자재의 수집은 가능하나 유통시킬 조직이나 경험이 부재

실내건축업과 주택으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잉여건자재량은 연간 33,520톤, 건자재 가치로는 1,594억 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실내건축업의 90%, 주택소유자의 87%가 조건이 맞으면 타인의 잉여건자재를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 외국에서는 잉여건자재 유통을 건자재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원시의 사이버건자재은행이 유일하나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건자재은행은 사회적으로 유익하나 생소하고 경험이 없다. 또한 잉여건자재의 수급 조건이 다양하여 시장에서 자생적인 정착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여건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가치를 인식시키고 자치구 단위로 확산하는 정책을 추진

건자재은행이 도입·정착되려면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이를 기반으로 확산시키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경제적 편익 제공, 기부문화 실천의 교육장, 투명한 조직운영으로 사회적인 인식을 높여야 한다. 둘째, 영역에 맞는 인력 배치, 적정규모의 매장과 창고 확보, 물품운반용 장비 운용 등 조직을 구비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셋째, 시범사업에서 출발하여 장기적으로 자치구 단위 시설로 확대하는 점진적 접근을 시도한다. 넷째, 기부자를 보호하고 집수리사업에 잉여건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여건을 정비해야 한다.

I. 서울시 잉여건자재의 현주소

잉여건자재는 실내건축업에서 많이 발생

건설업종 중 서울에는 실내건축업의 활동비중이 월등

- 서울의 실내건축업 집중도는 37% 수준
- 서울 소재 전문건설업체 수는 5,620개소로서 서울 집중도가 15% 정도이고, 일반건설업의 집중도는 13%
- 잦은 이사, 빈번한 업종변경이 실내건축업에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는 주요 이유

표 1. 서울시 실내건축업 현황

(단위 : 업체)

구 분	일반건설업(2015.1 기준)	전문건설업(2014.12 기준)	
	전체	전체	실내건축업
전국	10,981(100%)	37,117(100%)	4,547(100%)
서울	1,415(13%)	5,620(15%)	1,656(37%)
비고	토건,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등 5개 업종	실내건축, 토공, 미방조적, 석공, 도장, 비계, 금속창호, 지붕건조,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 등 12개 업종	

출처 : 대한건설협회(<http://www.cak.or.kr>), 대한전문건설협회(<http://www.kosca.or.kr>)

실내건축업에서 발생하는 잉여건자재는 연간 47,730톤으로 추정

- 실내건축공사는 특성상 많은 잉여건자재의 발생이 불가피
- 일반건설업, 대규모 공사현장은 긴 공사기간, 단계적 자재수급으로 잉여건자재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고, 발생하더라도 하자보수에 소진
- 한편 실내건축업은 공사기간이 짧고 소규모이며, 발주자마다 취향이 다양하여 건자재의 종류에 따라 건자재구매량 기준 5~8%의 잉여건자재가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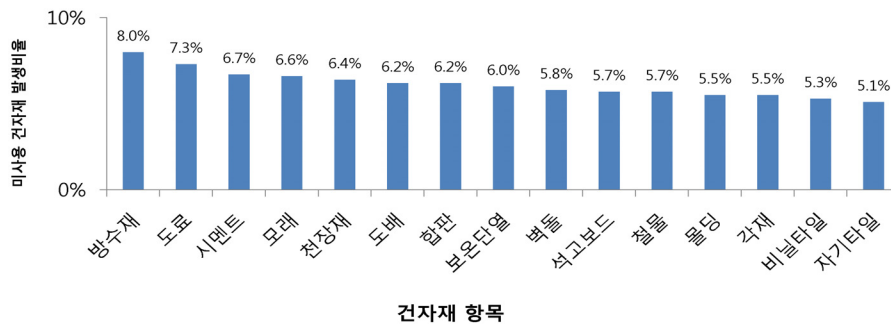


그림 1. 서울시 실내건축업 품목별 잉여건자재 발생량(구매량 기준)

출처 : 서울시 163개소 실내건축업 설문조사 결과

- 잉여건자재 중 자재상에 반품하는 양은 12.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보관 후 재사용(53.1%), 폐기(31.3%), 판매 등(3.1%)으로 처리
- 실내건축업이 연간 구매하는 건자재는 793,325톤이며, 이 중 6.4%인 51,120톤이 잉여건자재로 잔존
- 잉여건자재 발생량 중 12.5%는 자재공급자에게 반품되지만, 나머지 87.5%, 3,390톤은 보관 후 재사용, 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리

서울시 주택도 41,160톤의 잉여건자재를 보관 중

- 서울시 주택의 10.2%가 주택 건설 또는 집수리 후 잉여건자재를 주택에 보유
- 설문조사 결과,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22%,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5%, 아파트의 3%가 잉여건자재를 옥내에 보관하는 것으로 조사
- 주택에 보유하는 건자재는 벽돌, 자기타일, 도배지, 보온단열재, 석고보드 등으로 실내건축업의 잉여건자재보다 품목이 단순

설문조사 개요

설문 목적	미사용 건자재 발생과 처리 실태
대상 및 응답자 수	서울시 소재 실태건축업 163개소, 주택 100가구
조사기간	2014년 7월 1일 ~ 8월 30일(60일)
주요 내용	건자재 구매량, 보관량, 폐기량, 향후 처리계획, 타인이 제공한 자재 활용의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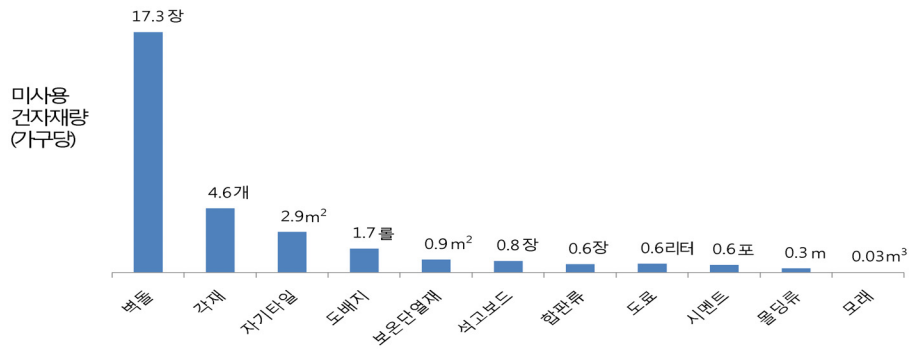


그림 2. 주택보유 품목별 가구당 잉여건자재량

보관과 폐기는 비효율적 자원사용과 환경오염을 초래

잉여건자재의 보관에 토지자원을 소모

- 잉여건자재의 보관에 실내건축업 41,169m³, 주택 45,368m³의 공간을 잠식
- 실내건축업 잉여건자재가 잠식하는 공간은 16,468m², 10ft 컨테이너 2,287대에 해당하고, 업체당 공간은 15m², 10ft 컨테이너 2대 분량
- 주택에서 보관하는 잉여건자재는 45,368m³, 라면상자(넓이 0.34m, 폭 0.25m, 높이 0.25m) 250만 개의 공간 차지

잉여건자재 폐기는 자원손실과 환경오염을 초래

- 실내건축업은 연간 16,000톤의 잉여건자재를 폐기하며, 이에 따른 건자재 손실액은 800억 원, 폐기물 처리비는 최대 27억 원, 온실가스 배출량은 600톤으로 추정
- 잉여건자재의 31.3%가 폐기될 경우, 이의 시장가치는 836억 원에 해당하고 건설업자는 7억~27억 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소요
- 폐기 잉여건자재를 매립으로 처리할 경우, 발생하는 온실가스량은 581톤-CO₂로 시내버스 5대가 연간 배출하는 양과 동일

II. 잉여건자재 수급과 건자재은행 활용 여건

실내건축업과 주택으로부터 잉여건자재 수집가능성을 확인

실내건축업과 주택소유자는 잉여건자재 제공의사를 표시

- 실내건축업과 주택으로부터 수집 가능한 잉여건자재량은 연간 33,520톤으로 추정되며 가치로는 1,594억 원에 해당
- 실내건축업을 대상으로 잉여건자재 기부의사를 물은 결과, 12.3%는 반드시 기부, 46.0%는 필요시 기부한다고 응답
-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잉여건자재 기부의사를 물은 결과, 3.3%는 반드시 기부, 40.0%는 필요시 기부한다고 응답
- 그러나 응답자의 다수가 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최소비용 보전, 사회봉사 인정, 종량제봉투 지급 등 반대급부를 요구

표 2. 잉여건자재 제공의사로부터 산출된 수집예상량

(단위 : 톤, m³, 억 원)

구분	수집예상량 (무게, 톤)	수집예상량 (부피, m ³)	수집예상량 (건자재 가치, 억 원)
실내건축업	29,956	28,584	1,565
주택	3,564	3,929	29
계	33,520	32,513	1,594

주 : 주택 수집량은 5년에 걸쳐 제공된다고 가정하고 산출

수집된 잉여건자재는 조건이 맞으면 상당한 수요가 예상

- 실내건축업은 집수리 의뢰자가 원할 경우 타인의 잉여건자재를 적극 사용
- 실내건축업의 49%가 타인의 잉여건자재를 활용할 의사가 있고, 사용하지 않겠다는 경우는 10% 내외에 불과
- 42%의 실내건축업은 집수리 의뢰자가 원하는 경우 타인의 잉여건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

- 주택소유자는 가격이 저렴할 경우 타인의 잉여건자재 사용에 긍정적
- 타인의 잉여건자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13%에 불과하고, 87%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며 특히 52%는 잉여건자재의 저렴한 가격이 선택의 조건
- 서울시가 비용을 보조하는 희망의 집수리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상 주택정책과),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사업(장애인복지과)에도 활용이 가능
- 주택의 70%가 집수리를 사업자에게 의뢰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주택 집수리사업에서 잉여건자재 사용도 실내건축업의 판단이 좌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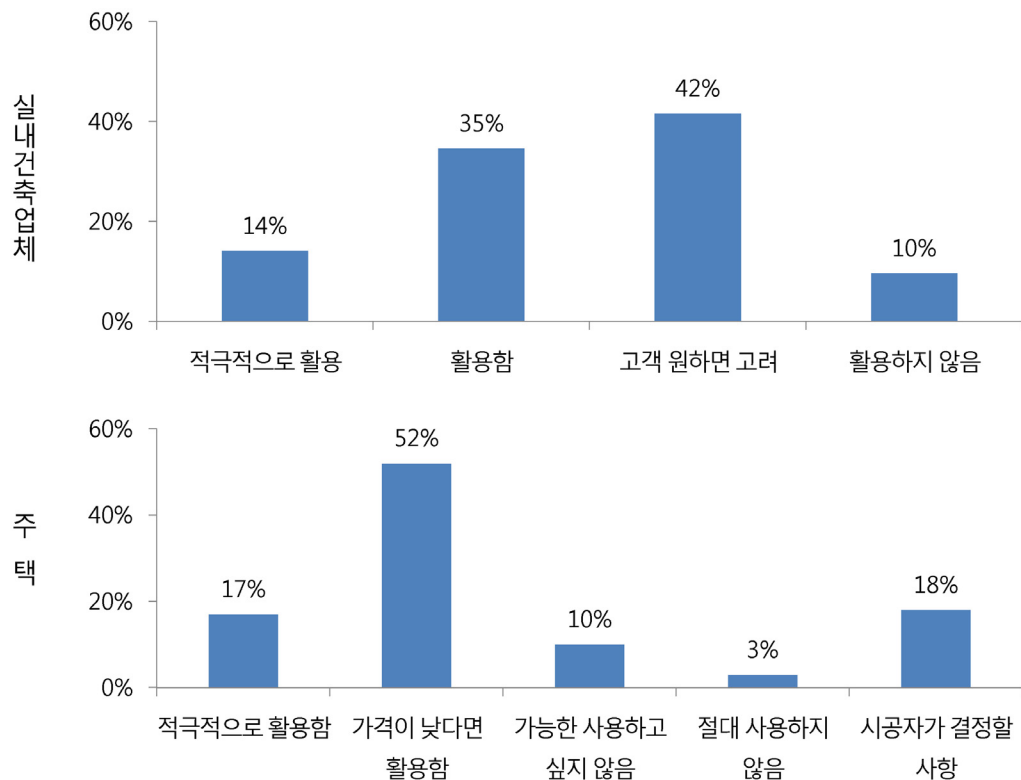


그림 3. 실내건축업과 주택의 잉여건자재 사용의사

외국에는 전자재은행이 정착되었으나 국내에는 생소한 단계

외국에서 전자재은행은 잉여전자재의 유통과 사회봉사를 병행

- 미국과 캐나다의 ReStore, 영국의 London Reuse는 기부센터 겸 판매점
 - ReStore는 200여 개, London Reuse는 25개 네트워크 매장을 운영하며, 건축자재, 가구, 조명, 집수리 공구 등을 기부 받아 판매하고 수익금은 사회에 환원
 - 자원봉사자는 기부물품에 대한 방문수거, 물품청소, 물품운반, 가격책정, 매장운영 보조, 매장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
- 영국의 RECIPRO는 온라인 네트워크에서 시작
 - 영국의 건설업체들이 웹에 구축한 잉여전자재 교환네트워크로, 2008년부터 보유자재와 필요자재를 등록하고 교환하는 활동을 시작
 - RECIPRO는 지역사회를 위해 집수리사업도 펼치고 학교 같은 공공기관에 저렴한 가격으로 전자재도 제공



영국 London Reuse 물류팀



미국 ReStore 매장



영국 런던 RECIPRO 홍보자료

그림 4. 외국 전자재은행의 사례

국내에는 실패사례가 있어 전자재은행에 대한 확신이 부재

- 국내 유일의 수원사이버건설자재은행은 비활성화
 - 수원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잉여전자재를 온라인 공간을 통해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건설자재은행을 구축하여 운영 중

- 그러나 관급공사업체들은 거래참여가 어렵고, 이용자에 대한 경제적인 편익이 없으며, 수원시도 쓰레기투기화를 우려하는 등의 여러 요인 때문에 비활성화
- 국내외 사례와 일반인의 인식에서 전자재은행과 관련된 과제와 한계를 확인
- 기부실적 인정, 적정대가 지불 등의 반대급부와 대량 기부자의 참여 없이는 잉여건자재 확보가 곤란
- 저렴하면서도 적정품질을 유지하고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의 다양한 제품을 함께 취급하지 않으면 잉여건자재의 수요창출이 곤란
- 외국의 전자재은행은 이익환원, 기부실천, 환경보전 등 사회적으로 유익한 조직으로 인식되나, 국내에서는 가치와 역할이 생소한 단계

표 3. 전자재은행과 관련된 우리사회의 과제와 한계

구분	내용
잉여건자재 수급수요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확보 시 기부실적 인정, 대가 지불 등 반대급부를 제공 • 품질을 확보하고 저렴하게 판매
수원사이버건설자재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자, 사용자 모두 경제적 편익을 기대 • 정부의 관심이 필요
중고품 판매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성이 불확실하여 기존 업체 참여를 주저 • 기존 품목과 공동 보관 및 진열 곤란
푸드뱅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실적 발급 및 대량 기부자 참여 유도 • 기부자와 수혜자 간 갈등이 발생
일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재은행의 역할 및 사회적 기능 • 우리나라 사회의 DIY(Do It Yourself) 비활성화
외국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익 환원, 공익사업 참여, 환경보전 등 사회적 기여 • 물품기부, 자원봉사자 활용 등 기부문화를 창출

III. 서울시 전자재은행 도입방안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자치구 단위 시설로 확산

전자재은행 도입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이 먼저 필요

- 잉여전자재의 처리실태, 수급 의사,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할 때, 전자재은행은 사회적으로 유익하나 생소하여 자생적인 정착에는 한계가 예상
- 잉여전자재의 발생과 보관 등의 과정에서 국가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초래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고, 외국 사례에서 전자재은행이 해결수단의 하나로 등장
- 그러나 전자재은행은 우리사회에 생소한 영역이고 실패한 사례마저 있어 시장에서 자생적인 정착과 성장은 난망
- 따라서 시범사업을 통해 전자재은행의 역할을 정립하고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으며 이를 기반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

주요 추진 전략

주요 과제	추진 전략
사회적으로 지지받는 기능 확립	- 잉여전자재의 제공자와 사용자에게 경제적 편익을 제공 - 기부문화를 실천하는 교육장으로 활용 - 투명한 조직으로 운영
전자재은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 영역에 맞게 인력을 배치 - 물품 확보와 판매에 매장과 창고가 필요 - 장비 운용으로 물품운반을 위한 기동성을 확보
정착을 위해 점진적으로 접근	- 시범사업으로 출발 - 자치구 단위 시설로 확산
원활한 정착을 위해 제도적 여건 정비	- 기부자와 구매자의 분쟁차단장치를 마련 - 서울시 보조 집수리사업에 잉여전자재 사용을 추진

사회적으로 지지받는 기능을 확립

잉여전자재의 제공자와 사용자에게 경제적 편익을 제공

- 잉여전자재 제공자는 중고물품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고, 기부실적을 인정하는 등 간접적인 편익을 제공
- 기부실적이 인정되면 사업체든 개인이든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처분에 따른 처리비용 및 보관공간의 절감도 가능
- 잉여전자재 사용자는 싼 값에 질 좋은 전자재 확보가 가능하며, 특히 정부보조가 이루어지는 다량의 전자재 확보로 집수리 범위를 확대

기부문화를 실천하는 교육장으로 활용

- 기부문화가 활발하지 못한 우리사회에 전자재은행은 잉여전자재 제공자에게 기부를 실천하는 기회를 제공
- 푸드뱅크에 식자재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기업, 아름다운가게에 중고물품을 기탁하는 자에게는 기부증서가 발급되고 세제혜택용으로 활용이 가능
- 전자재은행은 물품기부 이외에 자원봉사자에게도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재능기부와 봉사기부의 장을 마련
- 국내의 푸드뱅크나 외국의 전자재은행에서는 기부물품 접수, 물품 운반, 보관물품 정리, 매장운영 등에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

투명한 조직으로 운영

- 물품거래 실적, 기부자, 수입과 지출 내역, 수입금 활용내역, 조직운영 규정을 외부에 공개
- 공모를 통한 운영위원회 운영, 공모를 통한 인력 채용시스템 채택 등 제반사항을 인터넷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공개

전자재은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영역에 맞게 인력을 배치

- 자치구에서 전자재은행을 운영할 경우 필요한 인력은 8인 정도
 - 필요한 영역은 매장관리(1인), 물품 접수와 분류(1인), 물품운반(4인), 보조인력(2인)으로 구성
- 매장관리, 물품 접수와 분류에는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물품운반에는 준전문인력을 활용
 - 보조인력은 물품운반, 청소 등을 담당하며, 공공근로자 또는 공익근무인력 등 공공인력 활용이 가능

물품 확보와 판매에 매장과 창고가 필요

- 유사 사례에서 자치구 단위 전자재은행은 450㎡의 창고가 소요
 - 창고는 반입물품의 보관 및 분류와 재고물품의 보관에 필요하며, 모든 물품은 6개월 보관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창고를 확보
 - 물품과 장비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바닥의 50%만 물품저장에 활용하고, 물품은 3m 이내의 높이를 적재하여 원활한 적재 및 반출을 확보
- 자치구 단위 전자재은행에 매장은 400㎡ 예상
 - 매장의 물품진열기간은 3개월로 제한하고, 방문자의 편리한 쇼핑을 위해 진열면적 50% 이내, 진열대 높이 1.8m를 유지

장비 운용으로 물품운반을 위한 기동성을 확보

- 기부물품과 판매물품의 운반에는 차량이 필요하며, 자치구 단위 전자재은행당 1톤 화물차 2대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정착을 위해 점진적으로 접근

시범사업으로 출발

- 우선 전자재은행을 시범 운영하여 정착가능성, 운영방법, 가치 등을 평가하고 홍보
 - 자치구 단위 전자재은행 규모로 운영하고 전자재의 매입가격은 시장가격의 50%, 판매가격은 50%(집수리사업)~55%(일반구매자)로 착수
 - 시범사업의 주요과제는 물량확보 가능성 입증, 매입가격과 판매가격 책정 노하우, 운영 가이드라인 설정, 전자재은행 인식 확산 등
 - 서울시기 주관하는 나눔장터에 전자재은행 홍보부스를 운영
- 시범사업은 연 1억 7천만 원의 적자가 예상되므로 서울시의 지원하에 추진
 - 서울시 GT(Green Technology) R&D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향후 건설될 서울재사용플라자에 입주

표 4. 전자재은행 시범사업 경영수지 추정

구분	항목	예산 내용
수입	전자재 판매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재 판매수입 : 3,347백만 원 일반구매자 판매수입 : 1,753백만 원[= 6,376백만 원(시장가격) × 55%(가격) × 50%(물량)] 집수리사업 판매수입 : 1,594백만 원[= 6,376백만 원(시장가격) × 50%(가격) × 50%(물량)]
지출	전자재 매입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재 매입비용 : 3,188백만 원 저가판매자 : 100% ※ 순수 기부자는 10% 수준으로 예상되나 무시 저가판매자 매입비용 : 3,188백만 원[= 6,376백만 원(시장가격) × 50%(가격)]
	조직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 : 인건비 + 장비비 + 임대료 = 328백만 원 • 인건비 : 180백만 원[= 2.5백만 원 × 6인 × 12월] ※ 공공근로 또는 공익근무자 제외 • 장비비 : 46백만 원 구입비 : 30백만 원 × 2대 ÷ 6년 = 10백만 원 유지비 : 1.5백만 원 × 2대 × 12월 = 36백만 원 • 임대료 : 102백만 원 매장 : 400㎡ × 10,000원/㎡ × 12월 = 48백만 원 창고 : 450㎡ × 10,000원/㎡ × 12월 = 54백만 원
수집	수입-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지 : -169백만 원 전자재 판매수입 - 전자재 매입비용 - 운영비

자치구 단위 시설로 확산

- 단기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가치를 확인하고 사회적으로 존재를 인식시키는 사업을 서울시의 지원하에 시행
 - 1개소 시범시설의 설립운영을 서울시가 지원
- 중기적으로 4개소의 권역별 시설로 확대하되,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동지원하에 시행
 - 4개소 권역시설의 설립 운영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
- 장기적으로는 자치구 단위 시설로 확장하되, 자치구 지원은 부지확보, 폐기물처리 등 간접지원에 한정하여 자생시설로 성장을 유도
 - 25개소 자치구 단위 시설을 민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설립하여 운영

표 5. 서울시 건자재은행 정착을 위한 접근 절차

구분	단기	중기	장기
건자재은행 분포	• 시범사업(1개소)	• 권역별 시설(4개소)	• 자치구별 시설(25개소)
설립 · 운영	• 정부	• 정부 • 사회적기업	• 민간기업 • 사회적기업
운영비용 확보	• 서울시 비용 보조	• 서울시 비용 보조 • 자치구 비용 보조	• 자치구 간접지원
취급물품	• 미사용 건자재	• 미사용 건자재 • 기타 중고생활용품	• 미사용 건자재 • 기타 중고생활용품
건자재 확보	• 실내건축업 • 주택 • 건자재 생산기업 • 불용 관급자재	• 실내건축업 • 주택 • 건자재 생산기업	• 실내건축업 • 주택 • 건자재 생산기업
건자재 활용	• 건축업자 • 일반구매자 • 취약계층 수요자 • 공공 집수리 사업	• 건축업자 • 일반구매자 • 취약계층 수요자 • 공공 집수리 사업	• 건축업자 • 일반구매자

원활한 정착을 위해 제도적 여건을 정비

기부자와 구매자의 분쟁차단장치를 마련

- 기부한 물품으로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가 아닌 이상 기부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법적 장치가 필요
- 푸드뱅크는 민법, 형법에 따른 책임을 면하는 법규를 운용

기부자와 사용자 분쟁예방 법규정 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 제8조(민·형사상의 책임감면)

- ① 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자(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기부식품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제3조의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 등인 경우
- ② 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때에는 제공자·사업자 그 밖에 기부식품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 내지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서울시 보조 집수리사업에 잉여건자재 사용을 추진

- 서울시가 비용을 보조하는 희망의 집수리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상 주택정책과),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사업(장애인복지과)에 사용을 의무화

서울시 보조 집수리사업 예

희망의 집수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차상위 • 내용 :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 • 금액 : 가구당 100만 원 이내 무상지원 • 담당부서 :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내용 : 주택의 단열, 이중창 교체 등 • 금액 : 호당 300만 원 이내(서울시 최대 120만 원, 민간기부금 매칭) • 담당부서 :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한국해비타트(2013년)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차상위 이하 장애인가구로 자가주택 또는 소유주 허락주택 • 금액 : 가구당 500만 원 • 담당부서 : 서울시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과